

24.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8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통국장)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2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6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병준 철도시설과장)

### ☐ 제안이유

- 대구산업선은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우리시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연계와 접근성 확대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

- 서재·세천지역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성서공단지역 근로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추가건설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
- 우리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코자 함

## □ 주요내용

- 역사 건설을 위하여 사업비부담, 업무범위, 건설시행, 건설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역사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고 사업비는 대구시가 부담
- 역사 건설의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의 1,529억원으로 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설계 결과로 산출된 총사업비를 대구시가 부담
- 사업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납부
- 역사 건설의 준공과 동시에 철도시설은 국가에 귀속
- 협약서 변경 및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 결정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건호)

- 본 동의안은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추가건설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서·남부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계하고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조 4,595억원(국비 13,066억원, 시비 1,529억원)을 투입하여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일반철도를 건설하는 것임.
- 2019년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에는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의 강한 요청으로 추가 역의 건설비용을 대구시가 부담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함에 따라 금년 3월 고시된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음.
-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역사 건설은 공단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대구시가 부담하며, 준공과 동시에 용지를 포함한 철도시설은 국가에 귀속되고 협약의 변경이나 사업관련 분쟁,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역사 건설 사업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기본 계획상 사업비는 1,529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공단에서 설계를 시행하여 산출된 총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에 의해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증가분도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총사업비 부담분은 1,529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sup>1)</sup>에서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은 서재·세천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성서공단지역 근로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므로 건설비용을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철도건설법)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공단의 설계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면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2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차별 투자계획상 2027년 이후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1,288억원에 달하며, 동의안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시행 전까지 사업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사시행을 유보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와 손해를 대구시에서 책임져야 하므로 재정 마련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협약의 해석과 변경,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상호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추후 공단과의 협의가 합리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설계나 공사 시 지장물 보상을 대비해 동의안 제5조제1호라목에 용지매수와 더불어 ‘지장물’ 보상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대구산업선의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	○ 2027년 기준 1일 29,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역사 건설 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개 역에 대한 운영비는 개통 1년 전에 다시 협의할 계획임.
○ 대구산업선의 역명 제정 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되며 대구시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 역명 제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이며, 시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